

트럼프정권의 통상전략과 한일의 대응



2017. 1. 16

한일경제협회
이종윤 부회장

목 차

- **머리말**
- **왜 트럼프 정권이 출현했나**
- **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**
- **트럼프 통상전략**
- **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경제에의 영향**
- **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의 대응**
- **결 언**

머리말

트럼프 정권의 출현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상당한 변화 초래 예상

보호무역 천명
다자주의 지양, 양자주의 채택



한국 일본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예상

시장 경제질서 추구
자원부족과 인구과잉으로 가공무역 형 경제발전 채택

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

왜 트럼프 정권이 출현했나

1. 왜 트럼프 정권이 출현했나

'뉴이코노미'의 등장과 백인 중산층 근로자의 몰락

8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율화



금융기관 간 경쟁과열로 금융수수료 인하

수익하락 만회를 위한 통폐합 진행으로 거대 투자은행 등장과 과점체제 형성
(리먼브라더스, 골드만삭스, 웰스파고, 뱅크오브 아메리카, 씨티그룹 등)

주요 기업들의 주식이 거대투자은행 및 기관투자자에게 집중

주요 기업들에 이사를 파견,
기업의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압박

뉴이코노미 (주주자본주의 /대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체제)의 등장

구조조정(불요불급한 인적·물적 경영자원의 퇴출 등)을 통해 이익 증대 및 주가상승 추구

(백인 중산층)근로자들이 대거 추출되거나 비정규직 저임금자로 전락하고 자본주와 고급기술자,
경영인력은 소득이 높아져 분배구조의 불평등 심화

1. 왜 트럼프 정권이 출현했나

※ 미국 GDP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



출처 : Federal Reserve Bank of St. Louis

1. 왜 트럼프 정권이 출현했나

글로벌리즘

해외 이민의 자유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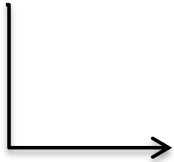


저임금 이민자 대량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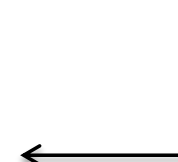
저가격 제품의 수입



비 첨단산업의 도산·경영악화



실업/비정규직화



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

2.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

① 세제개혁 (소득세, 법인세)

- 소득세 세율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33%로.
- 법인세율을 35%에서 15%로 인하

② 기업의 해외 이전 저지를 위한 세제개혁

-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10%의 추가세금 부과

③ 에너지개발, 인프라투자 촉진

- 1조 달러 투입

④ 교육개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

- 수업료 경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효과+능력향상

⑤ 오바마케어 폐지를 통한 재정지출 억제

⑥ 육아·요양 지원을 통해 중산층 소득 지원 및 생산적 근로시간 확보

⑦ 불법이민 방지대책 확립으로 미국 근로자의 직장 확보

2.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

■ 무역장벽 도입 및 엄격한 이민정책

-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저가제품의 대량 수입 억제로 자국산업 보호
- 엄격한 이민정책을 통해 경기진작효과의 해외유출 방지하고 자국근로자 일자리 확보

■ 러스트 벨트(Rust belt)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(백인)근로자의 직장 안정화

- 미국 경제정책이 그 동안 비교우위부문에 기술·경영자원을 유도하고 비교열위 부문을 방치한 결과 피해를 입은 비 첨단산업(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, 건설 등)을 '보호무역주의 강화'를 통해 재활성화

* 러스트 벨트 :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로, 위스콘신, 미시건, 펜실베이니아, 오하이오가 이에 해당

2.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

■ 트럼프가 구상하는 인프라 투자 _ 인프라민영화

- 무너져가는 다리와 낙후된 공항청사 등의 인프라 재건
- 연방세 공제 1,670억 달러 통해 민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비 조달

- 연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 세금 공제
 - 투자자들은 공사비 일부를 조기계약금 형태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채권시장으로부터 차입
 - 인프라(고속도로, 다리, 상하수도 등) 건설 후 이용료 수익

➔ 경기 활성화

➔ 인프라 정비를 통한 미국의 생산·소비 활동의 정상화

2.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

■ 親시장 親기업 트럼프노믹스

- 월가 투자자인 스티븐 므누신, 월버 로스, 게리 콘을 재무장관, 상무장관, 국가 경제위원장(경제자문)에 발탁
- 트럼프 정책의 키워드 : 성장, 일자리, 시장
 - ▶ 2%대 성장률을 4%수준으로
 - ▶ 약5조8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 촉진
 - 소득세 최고세율을 39.6%에서 33%로
 - 법인세율을 35%에서 15%로
 - 상속세 폐지
 - ▶ 향후 10년간 2,50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
- 기술한 바와 같은 트럼프의 총수요 확장정책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예상
 - 세출효과 : 2017년 10~12월 예상
 - 감세효과 : 2018년 예상

2.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

[문제점]

(1) 감세혜택이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는 부자감세논란 (빈부격차확대)

- '상위 1%에 51%, 상위 10%에 71%의 혜택이 집중'(조세정책연구원)

	현행제도	트럼프 안
소득세율	10 15	12
	25 28	25
	33 35 39.6	33

(2) 재정수지 악화 우려

-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적자 규모는 10년간 5.3조 달러
- '감세가 이루어지면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.5%에서 2025년 10%이상으로 급증' (무디스 애널리틱스 마크 잔디)

(3)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과 強달러가 신흥국의 국제유동성 악화 초래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

→ 국제금융시정의 불안정 시정을 위한 국제 여론 높아질 것.

트럼프 통상전략

3. 트럼프 통상전략

■ 보호무역주의 (다자주의 → 양자주의)

- 다자주의의 산물인 TPP철폐 및 NAFTA조정
- 바게닝파워 등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상대국간의 교섭 시 미국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

· TPP가 폐기되면,

-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질서 경쟁은 '미국·일본 vs 중국' 대결구도로.
-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(一帶一路) 진전
- RCEP와 FTAAP(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대)를 통한 지역통합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

*RCEP :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, 호주·뉴질랜드·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

*FTAAP: APEC회원국 21개국간의 전면적 FTA

- 창설국12개국(한국,미국,일본,캐나다,호주,뉴질랜드,태국,말레이시아,인도네시아,싱가포르,필리핀,브루나이)+중국,대만,홍콩,멕시코,파푸아뉴기니,칠레,러시아,베트남,페루

3. 트럼프 통상전략

■ 중국, 일본, 한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압력 예상

-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45%관세율 적용 공언
 - 실행여부는 불확실하나 중국경제의 위축은 중국에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·일 경제도 타격 예상
- 중국,일본,한국의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해, 3개국 통화가치의 큰 폭의 절상 추진
- 反중국 성향의 나바로 교수를 국가무역위원회(NTC)수장으로 임명
 - NTC는 'BUY America HIRE America'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제정책 추진
 - 나바로 교수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외 강공드라이브 추진 천명
 - 제1 타겟은 대미 최대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중국

[평가]

고율의 수입관세 부과나 환율 절상유도는 (미국의)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자국 내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

3. 트럼프 통상전략

■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

- 미국의 對중국 정책이 저항에 부딪칠 경우에 대비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
-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(렉스 틸러슨)을 국무장관에 지명

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 경제에의 영향

4. 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 경제에의 영향

■ 통상정책이 양자주의로 변한다는 것의 의미

- 강자에 의한 약자에의 교섭력 강화 여지 발생
- 미국은 강한 경제력에 압도적 기축통화라는 지위 활용 가능
- 강자가 약자의 취약한 부문을 치고 들어오면 약자는 상당부분 강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

<사례>

1997년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에 맞춰 은행들이 선진국 수준의 BIS비율에 맞추고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500%에서 일거에 100% 수준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기업과 자본재를 헐값에 매각하여 심각한 국부유출 사태 빚음

- 미국의 금융자본이 한국경제의 취약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기획

4. 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 경제에의 영향

-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통상질서를 보호주의적 흐름으로 변화시킬 개연성 높음
 - 가공무역입국을 지향하여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
- 한일 경제는 중국경제에의 의존도가 높는데, 중국제품의 대미시장 수출 억제조치로 인한 중국 경제의 축소는
①한일 경제의 축소 조정 ②중국에 진출한 한일 기업의 대미수출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
- 무관세를 노리고 NAFTA지역권인 멕시코에 진출한 한일 기업의 대미 수출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

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의 대응

5. 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의 대응

RCEP 체결

■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진행상황

- 2013년 협상을 개시, 협상 종료 목표를 2015년, 그 뒤 2016년으로 변경했으나 개방수위(지적재산권 포함문제, 농산물 개방 등)나 협상주도권을 놓고 이해관계 대립
- 차기 회담은 2017년 2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

■ RCEP의 필요성

- 대미 통상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RCEP활동으로 보완 가능
- 미국과의 통상교섭에서 보다 여유롭게 대처 가능

■ RCEP의 추진방향

- 한일의 주도하에 우선은 중국을 포함하여 가능한 국가만으로 RCEP을 출범시키고 점차적으로 자유도와 회원국을 확대

5. 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의 대응

중국 위안(元), 일본 엔(円) 활용도 제고

■ 역내통화로서 위안과 엔의 역할 확대

- 미국의 지나친 (한중일 화폐의)평가절상 요구에 대처 가능
-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미국의 금융적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
- * 1997년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한국,태국,인도네시아, 심지어는 일본마저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

역내 구상무역 확대

■ 구상무역의 필요성

-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의 국제유동성 고갈 예상
 - 한일의 대 신흥국 거래도 축소가 예상 되는데, 신흥국과의 구상무역이 거래축소를 막는 방법
- 구상무역 방법에 대한 사전논의 필요

* 구상무역이란?

대금결제 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
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
수출자가 나중에 수입자를 상대로 수입계약을 맺는다는 조건으로 최초의 수출계약을 체결

5. 트럼프 통상전략_ 한일의 대응

일-러 경제협력에 참여

- 일본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확대 예상
 - * 자원에너지, 중소기업 협력, 의료협력, 농업개발 등
- 한국의 장점(EPC기술력, 가격경쟁력 등)을 살려 개발 초기단계부터 참가 필요

미국 경제에의 효율적 접근

- 트럼프 정권이 추진할 각종 수입규제는 미국 내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 초래 예상됨
- 그들의 애로부문에 적절히 파고드는 전략 필요

(예시) · 미국의 인프라 투자과정에서 한국 건설업의 참여
· 물가가 높아진 애로 부분 찾아내서 선별적으로 접근

5. 트러프 통상전략_ 한일의 대응

기업 경영권 보호 조치

- 기업 경영권 보호장치를 통해 해외 자본의 기업사냥으로부터 경영권보호

▶ 대주주 경영권 보호제도

차등의결권-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

초다수결의제- 임원해임과 인수합병을 위한 출석주주 의결 요건과 발행주식 보유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을 정관에 반영

황금낙하산-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임원이 적대적 M&A로 임기 전에 퇴임하면 거액의 퇴직금, 저가의 주식 매입권(스톡옵션)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, 사실상 인수 비용을 늘려 공격자 측의 부담을 주는 조항

제3자 신주배정 유상증자- 회사의 특정 연고자(회사의 임원, 거래처, 거래은행 등)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인수토록 하는 것

결언



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이고, 직간접적으로 미국경제에의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로서는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함



단, 성급한 대응은 지양하고 미국 변화의 흐름을 냉정히 지켜보면서 변화에 상당한 대응이 필요하며 인접국인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

감사합니다